

■李대통령 연일 대일 강경발언 배경·전망

■ 현장과 시각 ■

과거사 문제 日 태도 변화 거듭 압박

광복절 축사 독도 언급 안해 추가 자극 자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에 이어 '일왕 사과와 위안부 문제' 발언까지 일본을 향해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 "전시(戰時) 여성인권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와 관련,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미 지난 10일 이후진 독도 방문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의 국토 수호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이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는 거듭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양국 치원의 문제가 아닌 전시(戰時) 여성 인권 문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일왕이) 한

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일왕

을 향해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사과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역대 대통령으로서 처음 독도를 방문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과거사를 놓고 행동과 말로써 일본을 밀어붙이는 것은 일본 스스로 사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일본을 이렇게 압박한 것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사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줄곧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줬지만 오히려 지난달에

는 자국 방위백서에 8년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등 개선의 여지 없이 그냥 시간만 흘려보냈다는 게 이 대통령이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도 "과거사에 얹힌 사슬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성노여 문제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노다 총리는 자국 내 극우파 목소리에 힘

쓸려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자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렇다고 대일 외교정책의 기조가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간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교류가 있다. 외교 정책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역시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미래를 열어야 할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일 간에는 당분간 외교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일본의 요구로 연기되고 일본 민주당 정부에서 처음으로 일부 각료가 애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일본 쪽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박자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

'책임'(責任)의 한자 풀이는 흥미롭다. '책'(責)의 본래 뜻은 진 빚을 갚기 위해 일한다는 의미다. 회초리를 본뜬 상황에 재물(貝)을 합한 글자로 재물을 빌렸다. 제때 갚지 못하면 채찍질하고 꾸짖는다는 옛 풍습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종행<정치부 기자>